

대이란 제재 완화 동향 및 시사점

박재은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동팀 연구원 (jepark@kiep.go.kr, Tel: 3460-1165)



차 례 ● ● ●

1. 대이란 제재 완화 배경
2. 대이란 제재 완화의 주요 내용
3. 국제사회의 반응
4. 향후 전망
5. 한·이란 경제관계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

- ▶ 2013년 11월 24일 P5+1과 이란이 핵 협상을 타결하여 '공동행동계획(Joint Plan of Action)'에 합의함.
 - 이란 핵 프로그램은 주요 안보현안의 하나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10년 이상 핵 협상과 제재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음.
 - 이란은 온건개혁 성향의 하산 로하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경기회복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공동행동계획이 타결될 수 있었음.
- ▶ 공동행동계획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수준을 제한하면 국제사회가 6개월간 제재 강화를 중단하고 일부 부문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제한적·일시적·가역적인 조치임.
 - 이란은 향후 6개월간 △ 20% 수준의 농축 우라늄 전량 희석 △ 5% 이상 농축 우라늄 생산 중단 △ 추가적인 핵 활동 중단 및 우라늄 농축시설 신설 불가 △ IAEA 일일 사찰 허용 등을 이행해야 함.
 - 제재 완화조치는 해외에 동결된 일부 이란 자산에 접근 허용, 귀금속·자동차 부문·석유화학 수출에 부과된 제재 중단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이란에 70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 국제사회는 대부분 핵 협상 타결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일부 국가는 우려를 표함.
 - 대다수 국가는 이번 합의가 불안요소를 제거하여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등은 우려를 표명함.
- ▶ 우리 기업은 제재 완화 부문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시장을 재선점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하며, 비제재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 전략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산업과 같은 제재 완화 부문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신재생에너지·중소형 공장·정보통신기술 등 비제재 부문에 적극 진출한다면 불확실성을 낮추는 동시에 수출다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이란 내 한류열풍을 바탕으로 한 문화 예술 교류, 교육·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한 인적 교류 등 경제 이외의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1. 대이란 제재 완화 배경

■ 1979년 미국 주도의 양자 제재로 시작된 대이란 경제제재는 2006년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채택되면서 다자 제재로 확대됨.

- 미국은 1979년 발생한 주이란 미 대사관 인질사건 이후 이란을 자국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대이란 제재를 주도해왔음.
- 미국은 1979년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2170」으로 이란 정부 자산 동결, 1984년 이란을 테러 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으로 지정, 1987년 「행정명령 12613」으로 이란 상품 수입 금지 등을 시행함.
- 1990년대 들어 미국은 더 이상 양자 제재(bilateral sanction)로 이란 경제를 압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을 규제하는 삼자 제재(secondary sanction)를 도입함.
- 미국은 1992년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제3국을 제재하는 「이란-이라크 무기 비확산법(Iran-Iraq Arms Nonproliferation Act)」을 시행하였고, 1996년에는 미국 및 제3국의 대이란 석유·천연가스 부문 투자를 제한하고 위반 시 금융제재를 부과하는 「이란 리비아 제재법(Iran Libya Sanction Act)」등을 시행하였음.
- 2002년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의 존재가 밝혀진 후 국제사회는 다자 제재(multilateral sanction)인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여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해왔음.
-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UNSC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는 2006년 UNSCR 1696, 1737을 시작으로 2007년 UNSCR 1747, 2008년 UNSCR 1803, 그리고 2010년 UNSCR 1929가 채택되었음.

■ 2010년 UNSCR 1929 채택 이후 개별 국가 차원의 독자적인 제재가 도입되었으며, 특히 미국·EU를 중심으로 삼자 제재가 강화되었음.

- 2010년 「UNSCR 1929」는 가장 강도 높은 UNSCR로 UN 회원국의 동참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EU, 한국, 일본,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스위스 등 각국이 독자적인 대이란 제재를 발표함.
- 미국은 2010년 「포괄적이란제재법(CISADA)」, 2011년 「행정명령 13590」, 2012년 「2012 국방수권법(NDAA 2012)」, 「이란위협감소 및 시리아인권법(ITRSHRA)」, 2013년 「2013 국방수권법(NDAA 2013)」, 「행정명령 13645」를 시행함.¹⁾
- EU도 2010년 각료이사회 결정을 통해 이란의 석유·천연가스 부문을 제재하는 「2010/413/CFSP」, 이란산 원유·석유·석유화학 제품의 운송에 대한 직간접적 재정지원과 (재)보험을 금지하는 「2012/35/CFSP」, 조선 부문 제재 및 흑연·알루미늄·강철·특정 소프트웨어 등의 거래를 금지하는 「2012/635/CFSP」를 시행함.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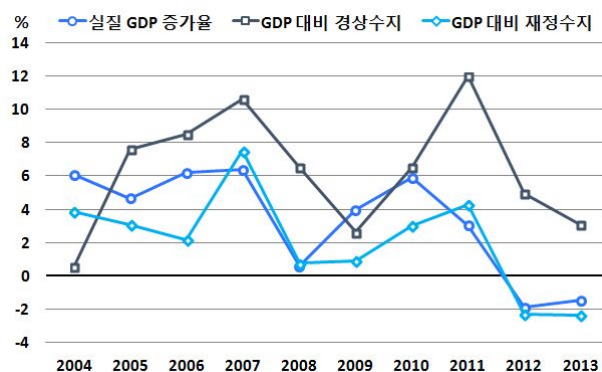
1) CISADA는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NDAA는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ITRSHRA는 Iran Threat Reduction and Syrian Human Rights Act의 약자임.

2) CFSP는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의 약자로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의미함.

■ 이란은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로 인해 2010년 이후 경기 침체가 가속화됨.

- 2011년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실질 GDP 증가율은 감소하였고, 2012년 이란 원유 부문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원유 수출 규모가 급감함.
- 2012년 7월 미국 「2012년 국방수권법」은 이란산 원유 수입국에 180일마다 수입 규모 축소를 강제하였으며, EU 「각료이사회결정 2012/35/CFSP」는 EU 보험회사가 이란산 원유 수송선에 (재)보험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제함.
- 미국과 EU의 제재로 인해 이란의 일일 원유 수출량은 2011년 250만 배럴에서 2012년 100만 배럴로 급락하였고, 이로 인해 8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됨.³⁾
- 원유 수출의 감소로 인해 2012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도 악화됨 (그림 1, 그림 3 참고).
- 원유 수출은 이란 정부 재정의 50%,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핵심 수입원임.
- 이란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 3.0%에서 2012년 -1.9%로 급락하였으며, GDP 대비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도 각각 2011년 12.0%, 4.1%에서 2012년 5.0%, -2.3%로 악화됨.⁴⁾
- 또한 금융제재로 인해 이란 내 외환 유입이 거의 중단되면서 환율이 폭등하였고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미침 (그림 2 참고).
- 이란중앙은행 및 주요 은행과의 거래가 규제되어 이란 내 외환 유입이 거의 중단됨에 따라 2008년 966억 달러였던 외환보유고는 2012년 740억 달러로 감소하였고 2013년에는 680억 달러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⁵⁾
- 달러당 리알화 가치는 2012년 전년대비 14.7% 하락하였고 2013년에도 52.5%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평가절하가 가속화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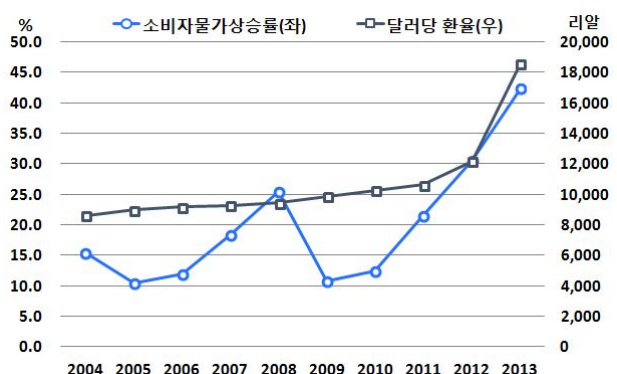
그림 1. 이란의 거시경제지표(2004~13년)



주: 2011년 이후는 추정치임.

자료: IMF WEO DB(검색일: 2013. 12. 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 이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환율(2004~13년)



주: 2013년은 추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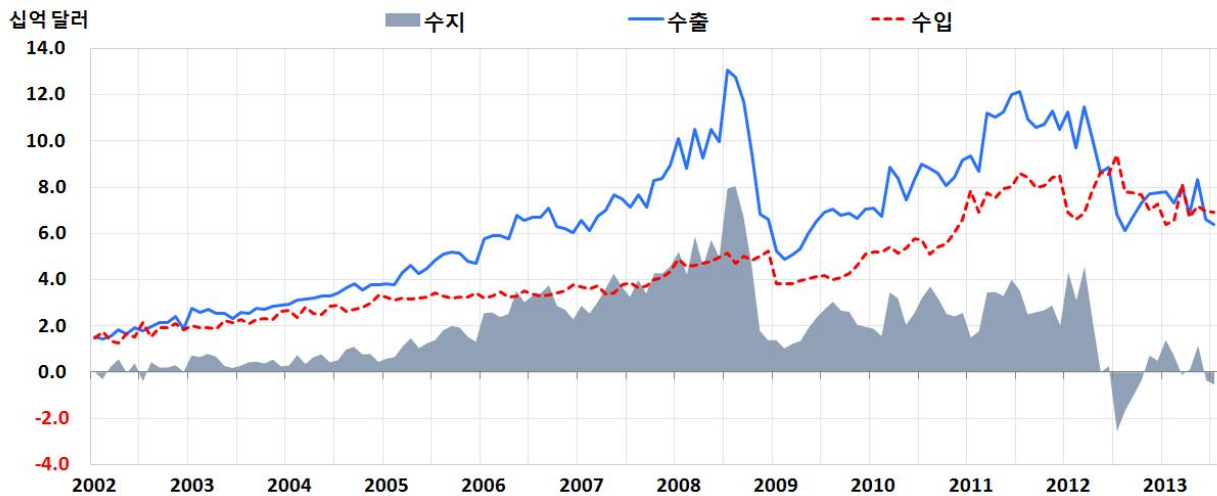
자료: IMF WEO DB(검색일: 2013. 12. 4); EIU DB(검색일: 2013. 12. 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The White House(2013. 11. 23), "Fact Sheet: First Step Understandings Regarding the Islamic Republic of Iran's Nuclear Program".

4) IMF WEO DB(검색일: 2013. 12. 4).

5) 이란의 공식 외환보유액은 발표되지 않음. EIU(2013), Iran Country Report September 2013, p. 8.

그림 3. 이란 월간 교역 추이 (2002년 1월~2013년 7월)



자료: IMF DOTS DB(검색일: 2013. 12. 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13년 8월 출범한 온건개혁 성향의 이란 신정부는 국제관계 개선을 통한 경기회복에 주력함.

- 대외관계 악화로 인해 이란이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고립되자 아흐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강경보수 세력에 대한 국내 여론이 악화됨.
- 강경보수 세력에 대한 불만으로 2013년 6월 제11대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온건개혁 성향의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가 당선되었고, 그에 따라 정치·경제적 상황 개선, 핵 위협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가 고조됨.
 - 로하니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핵 협상 타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핵 프로그램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여 국제사회와 상호협력하겠다고 공약하였음.
- 당선 이후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 언론에 '원한(blood feud)의 시대'는 끝났으며 향후 국제사회에서 '건설적인 참여(constructive engagement)'를 확대하겠다고 기고하였으며, 제68차 UN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표명함.⁶⁾
- 9월 27일, 로하니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져 1977년 이후 36년 만에 양국 정상직접 대화하는 등 유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핵 협상 타결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 이란 정치·경제 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핵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보임.

- 2002년 세상에 알려진 이란 핵 프로그램은 10년 이상 주요 안보현안의 하나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 및 협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
- P5+1은 이란에 8년 만에 온건개혁 성향의 정부가 수립되자 이 기회를 활용하여 이란 핵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⁷⁾

6) Rouhani, Hassan(2013. 9. 20), "Why Iran seeks constructive engagement", *Washington Post*.

7) P5+1은 러시아,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permanent) 5개국과 독일을 의미함. 공동행동계획에서는 EU 3개국(독일, 영국, 프랑스)과 러시아, 미국, 중국을 의미하는 E3/EU+3으로 표기함.

2. 대이란 제재 완화의 주요 내용

■ 11월 24일 타결된 ‘공동행동계획(Joint Plan of Action)’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수준을 제한할 경우 대이란 제재 강화 추세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일부 부문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조치임.

- 이란은 향후 6개월간 △ 20% 수준의 농축 우라늄 전량 희석 △ 5% 이상 농축 우라늄 생산 중단 등을 시행해야 함.
- 또한 △ 나탄즈(Natanz) 연료 농축시설, 포르도(Fordow) 또는 아라크(Arak) 원자로에서의 추가적인 활동 중단 △ 우라늄 농축시설의 추가적인 설립 중단 △ 포르도·나탄즈 시설에 IAEA 일일 사찰 허용 등을 준수해야 함.
- 이란의 합의사항 이행이 검증되면 P5+1은 6개월간 제한적(limited), 일시적(temporary), 가역적(reversible)으로 제재를 완화하기로 함.
- 현 제재 완화는 어디까지나 잠정적 조치로, 이란이 향후 6개월 이상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포괄적 해법의 최종 단계(final step)를 논의할 수 있음.

■ 합의사항을 준수할 경우 이란은 제재 완화조치로 인해 7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전망이다.⁸⁾

- 이란이 상기사항을 이행할 경우 향후 6개월간 UN, EU, 미국은 핵 관련 신규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임.⁹⁾
- 해외에 동결된 42억 달러의 석유 판매대금을 이란으로 분할 송금할 수 있도록 허가함.
- 귀금속, 자동차 부문, 석유화학 수출 제재를 중단하여 이란에 약 15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됨.
-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금 중 4억 달러를 이란 유학생들에게 정부 학자금 형태로 지원하도록 허가함.
- 이란 민간 항공사에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부품 및 수리·점검 등 관련 서비스 제공을 허가함.
- 이란이 해외에 동결된 석유 판매대금으로 식료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인도적 품목을 거래할 수 있는 금융 채널을 설립할 예정임.
- 한편 제재 완화로 인해 이란산 원유 수입국도 추가 감축 없이 수입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음.

■ 대이란 제재의 핵심인 에너지 부문 제재와 금융제재는 유지될 전망이다.

- 이란산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과 운송·조선을 포함한 기타 산업에 대한 현행 제재는 유지됨.
- △ 대이란 석유제품 수출 △ 에너지 부문에 대한 장기 투자 및 기술 제공 등에 관련된 제재가 유지됨.
- 이란 중앙은행 및 20여 개 이란 주요 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기존의 금융제재는 대부분 유지됨.
- 기존 금융제재인 △ 해외에 동결된 1,000억 달러 규모의 외환 자산에 대한 접근 불허 및 제한 △ CISADA 및 기타 법이 지정한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은행에 삼자 제재 부과 △ 이란에 보험 및 광범위한 금융 서비스 제공 금지 및 미 금융시스템에 접근 불허 등은 유지됨.

8) The White House(2013. 11. 23), "Fact Sheet: First Step Understandings Regarding the Islamic Republic of Iran's Nuclear Program".

9) 미국은 정치제도가 허용하는 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추가함. 위의 자료.

- UN 안보리 제재, 이란의 테러 지원활동·시리아 분쟁을 악화시키는 활동·인권 탄압 등에 관련된 모든 제재는 유지됨.
- 이란의 군사 프로그램,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600여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모든 제재도 유지됨.

3. 국제사회의 반응

■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진전으로 평가하였으나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핵 협상 타결이 국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집중을 분산시켰다고 평가함.¹⁰⁾

- 오바마 대통령은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의 진행을 중단하기로 합의하였고, 협상에 따라 향후 이란 핵 시설 사찰을 통해 합의사항 이행을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며 높이 평가함.
- 그러나 일부 공화당원은 핵 협상 타결이 오바마케어(Obamacare) 등 국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분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은폐, 협상 결렬 등을 통해 핵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사례로 남을 수도 있다고 비판함.

■ 프랑스는 핵 협상을 앞두고 이란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으나 협상 타결 후 제재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 프랑스는 이란의 핵 확산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네 가지 요구사항(four demands)을 제시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음.
- 올랑드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핵 협상에 앞서 이란에 △ 모든 핵 시설에 국제적 사찰 즉시 허용 △ 20% 수준의 우라늄 농축 중단 △ 비축량 감축 △ 아라크 중수로 건설 중단을 요구함.¹¹⁾
- 프랑스는 요구사항이 반영된 공동행동계획이 타결되자 12월 또는 몇 주 내로 제재를 완화하겠다고 밝힘.¹²⁾

■ 터키와 대다수 걸프왕정국가는 이란 핵 협상을 환영하는 입장임.

- 터키 굴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였고, 외무부 장관은 테헤란을 방문하여 회담을 가짐.
- UAE는 이번 합의가 역내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고, 바레인도 자국과 이란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불안 요소를 제거한 것이라 평가함.
- 중동지역 내 미국의 핵심 동맹인 사우디아라비아는 협상 타결 직후 공식 발언을 하지 않았으나 이후 조심스러운 환영과 더불어 우려를 표명함.
- 사우디아라비아는 시리아 내 수니파 반군을 지원해왔으나 최근 미국이 시리아 분쟁 및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자 불만을 표하였음.

10) Yan, Holly and Josh Levs(2013. 11. 24), "Iran nuclear deal: One agreement, wildly different reactions", *CNN*.

11) Asquin, Herve(2013. 11. 17), "France firm on Iran nuclear issue, Hollande tells Israel", *AFP*.

12) "France could ease Iran sanctions 'in December'"(2013. 11. 25), *France 24*.

■ 이란과 적대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은 협상 타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함.

-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꿈이 국제사회에는 악몽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합의는 전 세계를 더욱 두렵게 만든 '역사적 실수(historic mistake)' 라고 비난하였음.
-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이스라엘과 이란의 적대관계는 지속되었으며, 이란은 레바논 헤즈볼라에 자금, 군사 기술 등을 지원해왔음.
- 영국의 선데이 타임스(Sunday Times) 등 일부 언론은 협상 타결 이후 네타냐후 총리가 모사드(Mossad)와 군정보부대(Military Intelligence)에 이란이 금지된 핵 활동을 하는 증거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함.¹³⁾

■ 이란 국내에는 핵 협상 타결에 대한 환영과 우라늄 농축을 현 수준으로 동결한 것에 대한 비판이 공존함.

- 로하니 대통령은 협상 타결을 환영하였으나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P5+1과 해석의 차이가 있음.
- 로하니 대통령은 모든 제재가 완화될 것이고 국제사회가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인정할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나, 공동행동계획은 일부 부문에 한하여 제재가 완화되며 5%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만 가능하다고 명시함.
- 한편 일부 보수 세력은 이번 협상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침해한 '독이 든 성배(poisoned chalice)' 라고 비판함.¹⁴⁾

표 1. 국제사회의 반응

국가	반응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함. 반면 일부 보수 정치인은 국내 문제에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비판함.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협상 타결이 중동지역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함. 이번 합의는 초기 단계로, 향후 상호 합의할 수 있는 통합적 해결책 마련에 주력해야 함.
중국	왕이 외교부 장관은 양측이 유연하고 충실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여 난제를 해결하였다고 평가함. 중국은 향후 외교적 노력을 통해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데 노력할 것임.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협상을 앞두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으나, 협상 타결 후 프랑스 정부는 제재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터키	굴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합의가 타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사우디아라비아	한 정부 관료는 현재 중동지역 내 불안요소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우회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다른 익명의 관료는 국내 여론이 중동에서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함.
이스라엘	각계에서 이번 합의를 '역사적 실수', '당사자들(P5+1)이 채택한 UN 안보리 제재를 무시한 합의', '이란이 핵무기 확보에 더 가까워지도록 방조한 합의' 등이라 비난함.
이란	대다수가 협상 타결을 환영하였으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비판도 존재함.
이집트	외교부 장관은 이번 합의를 중동지역 내 모든 국가의 안보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평가함. 한편 역내에서 모든 핵무기가 제거되어야 하며 이중 기준이나 예외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시리아	이번 합의는 대화와 외교의 승리이며, 국제사회가 이란의 우라늄 권리를 인정할 것으로 평가함.

자료: Yan, Holly and Josh Levs(2013. 11. 24), "Iran nuclear deal: One agreement, wildly different reactions", *CNN*, "France could ease Iran sanctions 'in December'"(2013. 11. 25), *France 24*, 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3) "Report: Netanyahu orders Mossad to find proof Iran violating nuclear accord"(2013. 12. 1), *The Jerusalem Post*.

14) Dareini, Ali Akbar(2013. 11. 27), "Iran Hard-Liners Criticize Geneva Deal", *Associated Press*.

4. 향후 전망

■ 이란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이란이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완화 조치가 철회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이란은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경제회생의 필수조건인 제재 완화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됨.
- 비록 일부 세력이 '공동행동계획'에 반발하고 있으나, 이란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하기로 결정한 만큼 반복될 가능성은 낮음.
- 최고지도자는 핵 협상에 앞서 "누구도 협상단을 타협주의자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대통령의 핵 협상 의지를 지지하였음.¹⁵⁾

■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핵 프로그램과 원유·천연가스를 제외한 부문의 제재를 우선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향후 행정명령을 통해 최근 제재를 부과한 부문 또는 대통령 권한으로 완화 가능한 부문 등을 우선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제재 완화 대상 중 귀금속(2013 국방수권법)을 제외한 석유화학제품 수출 제한(행정명령 13622)과 자동차 부문 제재(행정명령 13645)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제제한 부문임.
-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시행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다른 연방법에 비해 입법 기간 및 절차가 간소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제재를 완화할 수 있음.
- 현재까지 2014년 국방수권법 법안에는 이란 경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포함하지 않아 2012~13년에 비해 대이란 제재가 연방법 차원에서 강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그러나 대이란 제재 범위와 수위를 확대·강화한 「핵 이란 방지법(Nuclear Iran Prevention Act of 2013)」이 현재 하원 통과 후 상원에 계류 중임.
- 이 법안은 「2012년 국방수권법」을 강화하여 기존의 '이란산 원유 수입 규모의 상당한 감축'을 일일 수입량 100만 배럴로 명시하고, 「2013년 국방수권법」을 개정하여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광산, 건설, 엔지니어링 부문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함.¹⁶⁾

■ EU는 2014년 1월 중으로 제재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됨.

- 대이란 제재 완화 안건은 2013년 12월 16일에 예정된 EU 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15) Torbati, Yeganeh(2013. 11. 3), "Khamenei tells Iran's hardliners not to undermine nuclear talks", *Reuters*.

16) 이 법은 공화당의 에드워드 로이스(Edward R. Royce) 하원의원이 2013년 2월 27일 발의함. "H.R.850 - Nuclear Iran Prevention Act of 2013", United States Legislative Information, <http://beta.congress.gov/bill/113th-congress/house-bill/850?q=%7B%22search%22%3A%5B%22iran%22%5D%7D> (검색일: 2013. 12.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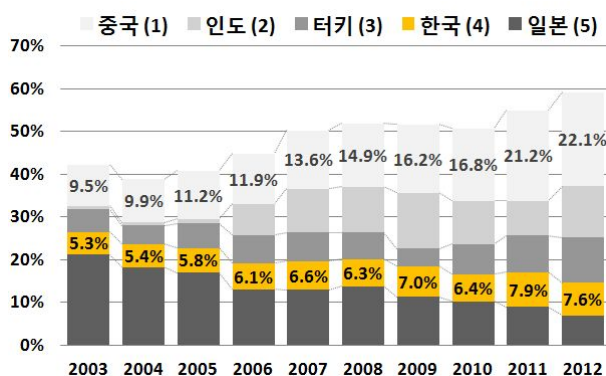
- 현행 제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EU 28개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하기 때문에 12월 회의에서 제재 변경 작업을 완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 EU 외무장관 대변인에 따르면 ‘기술적인 작업(technical work)’은 이미 시작되었고, 2014년 1월 중순경 제재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¹⁷⁾

5. 한·이란 경제관계 및 시사점

■ 우리나라는 대이란 제재를 준수하면서도 이란과 우호적인 교역관계를 유지해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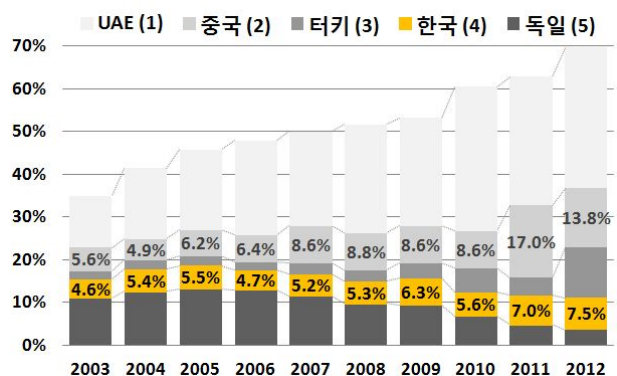
- 2012년 기준 우리나라는 이란의 수출·수입 대상국 4위를 기록함(그림 4, 그림 5 참고).
- 우리나라의 대이란 교역은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2 국방수권법 발효 이후 원유 수입을 축소하여 대이란 수입이 급감하였고, 2013년 7월 자동차·철강 등 핵심 산업의 수출 중단으로 대이란 수출 또한 감소함.
- 2013년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이란 누적 수출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30.1% 감소한 38억 900만 달러이며, 수입 규모는 33.5% 감소한 46억 7,200만 달러임.
- 2013년 10월 기준 주요 수출품은 영상기기, 종이제품, 합성수지, 철강판,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원유, LPG, 석유제품, 알루미늄, 기초유분 등임.
- 한편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가 강화된 2010년 이후 이란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되는 추세로, 대이란 진출 시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해야 할 것임.

그림 4. 이란의 수출대상국(2003~12년)



주: 괄호는 2012년 무역 규모를 기준으로 한 수출대상국 순위임.
자료: IMF DOTS DB(검색일: 2013. 12. 1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5. 이란의 수입대상국(2003~12년)



주: 괄호는 2012년 무역 규모를 기준으로 한 수입대상국 순위임.
자료: IMF DOTS DB(검색일: 2013. 12. 1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7) Landauro, Inti and Laurence Norman(2013. 11. 25), "EU Likely to Ease Sanctions Against Iran in January", *Wall Street Journal*.

■ 제재 완화 대상 중 우리 기업이 우위인 자동차 산업 등은 기존의 시장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 향후 제재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여건이 갖추어지면 신속하게 진출해야 함.

- 우리 기업이 우위였던 완성차 및 자동차용 강판 등 부품시장을 재선점하는 것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할 전망이다.
 - 우리 철강 기업은 이란의 자동차용 강판 시장점유율 50%를 상회하는 선도 기업으로 호드로(Khodro), 사이파(Saipa) 등 이란의 주요 자동차 기업과 거래해왔음.¹⁸⁾
 - 2009년 기아자동차가 호드로, 사이파와 기술제휴를 통해 생산한 NASIM/SABA는 이란 완성차 시장점유율 44%로 1위를 기록하였으나,¹⁹⁾ 2010년 이후 CISADA의 여파로 현대·기아자동차가 완성차 수출을 중단함.
- 에너지 관련 플랜트 부문은 제재 완화 대상이 아니지만 제재 이전 우리나라가 우위였던 부문으로 향후 제재가 완화되면 단순 토목기술이 아닌 고부가가치 기술 중심으로 진출해야 함.
 - 2009년 기준 우리나라가 수주한 이란 프로젝트 규모는 24억 9,200만 달러로 해외 건설시장 5위였으나,²⁰⁾ 2010년 CISADA 시행 이후 신규계약 체결이 전무한 상황임.
 - 현재 토목사업과 주택건설 등은 이란 기업이 직접 시공하며 그 외 플랜트 사업은 대부분 중국이 수주하는 것으로 알려짐.²¹⁾
- 현재 금융제재가 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화계좌를 사용하는 우리 기업이 결제 수단이 없는 EU나 미국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있음.
- 무엇보다 12월 9~10일 개최 예정인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될 합의사항의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미 재무부가 발표할 예정인 지침(guidance)을 파악하여 제재 변경사항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협상 타결 이후인 11월 26일 스위스 기업 웨더포드(Weatherford)가 대이란 제재를 수차례 고의적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9,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음.²²⁾

■ 또한 비제재 품목 시장에 진출을 확대한다면 불확실성을 낮추는 동시에 향후 수출 다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비제재 대상 4대 유망분야는 △ 보건의료 △ 신재생에너지 △ 중소형 산업설비 △ 정보통신기술 등임.²³⁾
- 이란 보건의료 시장에서 EU 기업들이 철수하여 우리 기업의 검사·진단장비, 의약품(항암제, 상비약, 복제약(generic) 등)의 진출이 유망해짐.

18) 테헤란 주재 철강업계 관계자 인터뷰(2013. 6. 27).

19) NASIM/SABA는 호드로와 사이파가 기아자동차 프라이드(Pride)를 현지화하여 생산한 모델임. 윤서영, 박철형, 강성수(2010), 『이란의 주요 산업: 자동차, 전력, 석유화학』, pp. 64~65, p. 71.

20)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http://www.icak.or.kr/sta/sta_1001.php), (검색일: 2013. 12. 6).

21) 테헤란 주재 건설업계 관계자 인터뷰(2013. 6. 26). 중국은 이란에서의 실적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 및 기술발전 잠재력 등을 내세워 해외건설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임. 중국은 그간 실적 부족으로 해외건설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았음. 해외건설시장에서 중국의 부상은 시간문제인데 이란이라는 특수한 시장이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22)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3. 11. 26), "Treasury Announces \$91 Million Settlement with Weatherford International LTD. for Apparent Sanctions Violations", <http://www.treasury.gov/press-center/press-releases/Pages/jl2223.aspx>, (검색일: 2013. 12. 6).

23) KOTRA 테헤란 무역관장 인터뷰(2013. 6. 24)를 토대로 저자 작성.

- 방사능 기기 등은 이중용도품목(전략물자)으로 수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완제품은 전용 가능성이 낮아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²⁴⁾
- 이란 북부는 고지대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풍력 발전에 적합하며 사막지대에서는 태양열 발전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신재생에너지 관련 장비의 수출이 유망할 것임.
- 이란 에너지 장관은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을 5,000메가와트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함.²⁵⁾
- 이란이 2012년을 자국 생산의 해(year of national production)로 지정하여 중소형 산업설비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자동화 라인 등을 포함한 생산설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²⁶⁾
- 정보통신기술은 여러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이러닝(e-learning), 전자교통시스템, 디지털병원 등 다양한 부문에 진출할 수 있음.
- 정보통신기술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도 강조되는 기술로, 향후 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을 발굴하여 단독 진출 또는 여러 산업과의 동반 진출이 기대됨.

■ 한편 이란 내 한류열풍을 바탕으로 한 문화 예술 교류, 교육·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한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2013년 10월 우리나라와 이란은 제3차 한-이란 문화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간 문화 예술, 교육, 체육·스포츠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함.²⁷⁾
- 외교부는 문화공동위 개최에 이어 제1차 한-이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7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란 체육청소년부(Ministry of Youth Affairs and Sports)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이 선수, 코치, 스포츠 전문가를 파견하고 국제스포츠기구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였음.²⁸⁾ KIEP

24) 이중용도품목(전략물자)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품목은 반드시 수출 전 전략물자관리원에 문의하여 이란 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25) "Iran to launch largest ME solar plant"(2011. 10. 21), PressTV; "Iran unveils achievements in field of renewable energy"(2013. 5. 19), PressTV. 이란 내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북부 만질(Manjil) 풍력발전단지, 중부 야즈디(Yazd) 태양열발전소(484메가와트급), 남부 쉬라즈(Shiraz) 태양열발전소(중동 최대 규모) 등이 있음.

26) The Office of the Supreme Leader(2012. 3. 20), "IR Leader: 1391, year of National Production".

27) 외교부(2013. 10. 2), "제3차 한-이란 문화공동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28) 문화체육관광부(2013. 7. 2), "문체부, 이란 체육청소년부와 체육교류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보도자료.